

# 國防史 編纂의 歷史的 意義

金 賢 永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장)

- 머 리 말
- 公刊史 編纂의 歷史的 傳統
- 國防史 編纂의 歷史的 意義
- 맺 음 말

## 1. 머 리 말

한 나라의 역사에서 하나의 문화적 전통으로 전대와 후대를 연결해 주는 가교가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역사적 소산'에 토대를 두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실(史實)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수단이 동원되었다. 수단은 생활양식(mode of life)으로서 문화의 각 영역에 나타난 다양한 방법이 채택된 것이다. 그 가운데 기록은 전달매체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전통적으로 각 나라에서는 기록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적인 유산을 후대

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당대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여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하여 역사서를 편찬해 왔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에서는 사관들이 국왕이나 관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여 기술했고, 국사에 있어서 모든 사건의 처리과정이나 공문서 내용 등을 그대로 적거나 혹은 요지를 담아서 역사서를 기술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잘 알려져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승정원일기', 나아가 '비변사등록'과 같은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전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군사사 영역에서는 1950년대 6·25전쟁의 전황을 매일매일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그 교훈을 새삼 되새기기 위해서 편찬한 '한국전쟁 전란1년지'로부터 '한국전쟁 전란5년지', 나아가 공간사적 의미에서 '한국전쟁사의 편찬은 우리의 기록문화적 전통을 계승한 편찬물이었다. 본고에서는 국방사(國防史)<sup>1)</sup>의 편찬과정을 통해 공간사 편찬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국방과 관련된 공간사의 편찬 실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국방사 편찬의 성과와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2. 公刊史 編纂의 歷史的 傳統

### (1) 歷史意識과 官撰史 編纂

과거에는 사관에 의한 왕조의 역사기록 및 정리작업이 공식화되어 있었다. 현대에 와서는 '기록물의 보존'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를 기록하는 역사

1)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방사'라는 용어는 광의적인 의미와 협의적인 의미를 동시에 뜻한다.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국방사란 국방역사, 즉 한국정부의 국방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역사를, 협의적인 의미에서 국방사란 대한민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국방활동 공간사인 『국방사』를 가리킨다.

가들의 역할보다 이를 분석연구하는 역사연구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9세기를 거쳐 역사연구가 학문적인 영역의 한 위치를 점유했기 때문일 것이다.<sup>2)</sup>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에 상관없이 역사연구에 앞서 역사 기록 및 자료보존이 선행작업이라는 점은 불변의 진리이다.

전통 왕조들이 시행해 온 사관제도도 엄정한 '역사의식'을 견지하면서 왕조의 통치행위는 물론,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까지 자세하게 기술하였는데 이는 전통시대부터 이루어진 관찬사(官撰史) 편찬의 전통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고려사』, 『고려사절요』, 나아가 『조선왕조실록』 등이 그것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은 해당 왕조의 사서기능을 크게 자극하여 비변사등록, 각사(各司) 및 승정원의 기록과 일성록(日省錄)과 같은 일기나 편년체류의 공간사를 편찬하는 전통을 남겨 주었다.<sup>3)</sup>

조상들의 역사기술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국왕의 통치행위를 일일이 기록하여 후대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역사의식', 곧 '기록문화(記錄文化)'에 대한 보편적 현상을 가져왔던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하여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기록문화의 전통은 현대사에서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몇 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군사사 분야에서 한국전쟁사의 기록이나 편찬 등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어 온 결실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6·25 전쟁후 국방부가 편찬한 공간사 발간은 매우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아마도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자는 결의와 대책으로 '한국전쟁사' 편찬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전되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군사사 연구를 통하여 국

2) 朴成壽, 『歷史學概論』, 三英社, 1993(2版 14刷), 33~34쪽.

3) 전통시대의 역사적 기록과 관련해서는 조동길 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하)』, 창작과 비평사, 1994;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학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5를 참조.

방정책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해 온 군사전문가나 지도자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4)</sup>

## (2) 國防·軍事 公刊史 編纂體制 定立

197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군은 국방의 발전에 부응하면서 중·장기적인 전략관단을 기초로 국방정책 개발에 큰 비중을 두었다. 그 결과 1972년 정책기획관 직제가 신설되어<sup>5)</sup> 국방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현실화되었다. 이렇듯 국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 설정된 국가목표에 따라 국방목표가 제정되면서 '시책'을 넘어서 본격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물론 1960년대에 들어와서 국방시책이 만들어진다든지<sup>6)</sup> 1967년과 1968년 두 해에 걸쳐 『국방백서』가 발간되어 국방정책에 대한 계획과 평가·전망을 종합하는 역할을 하였다.<sup>7)</sup>

그러나 우리 군이 국방정책과 국가목표의 상관관계하에서 군정·군령 분야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한 것은 1970년대였다. 우리나라의 국가목표는 1966년 국방부의 기본시책서에 처음으로 제시되었지만,<sup>8)</sup> 이는 1970년 안보회의 사무국에서 “국가안전보장 기본정책서”가 작성될 무렵에 대통령의

4) 이러한 인식은 『軍史』라는 전문군사연구지가 창간될 무렵에 강하게 표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영복, 「軍史研究의 重要性」, 『軍史』(創刊號), 1980, 8~9쪽 ; 박정인, 「民族軍史의 定立」, 10~12쪽 ; 이희성, 「軍史業務의 強化」, 12~13쪽 ; 윤자중, 「軍과 軍史」, 18~21쪽을 참조.

5) 「大統領令 第5874號」(1971. 12. 15 公布).

6) 國防部, 『國防史』第3輯, 1990, 62~76쪽.

7) 國防部, 『國防白書 1967』, 1966. 12 ; 國防部, 『國防白書 1968』, 1968. 6.

8)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은 1966년의 시책부더였지만, 정책발전의 방향과 정책지침에 따라 기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은 1970년 이후였다. 통상 기본정책에는 군사력 건설, 군·부대구조, 인력, 교육훈련, 정신전력, 예비전력, 정보·통신, 군수, 연구개발, 방위산업, 기획관리, 군사외교, 국방제원 등이 포함된다( 國防部, 『國防史』第3輯, 1990, 62~76쪽 ; 國防軍史研究所, 『國防政策變遷史』, 1995, 2쪽).

재가를 받아 확정되었다. 그 후 1973년 2월 16일 제23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부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9)</sup> 국가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국가목표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29일 국방목표가 제정되었다.<sup>10)</sup>

국가목표와 국방목표가 설정되자 이를 기초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다.<sup>11)</sup> 1970년대에 획기적인 전력증강사업이었던 한국군현대화계획(1971~1975)과 제1차 전력증강계획(육국계획 1974~1981)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방정책 분야의 발전과 도약에 힘입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國防·軍事의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국방부내에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군사사에 대한 일반 연구자의 관심이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하겠지만, '기획계획예산제도'<sup>12)</sup>의 도입 과정에서 보듯이 정책연구 및 개발에 우리 군이 심혈을 기울인 한 단면으로 이해된다.

특히 국방부는 합참과의 협력하에 국군의 자주국방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국군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군사전략 개발 및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sup>13)</sup> 군사연구의 풍토는 정부의 정책기조였던 자주국방을 위한 현실에 부합하는 국방기획제도를 정립하고, 나아가 1970년대 후반기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중기국방기본정책(中期國防基本政策)에서 한·미 군사협력체제의 유지와 더불어 독자적인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자주국방태세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적 토대가 되었다.<sup>14)</sup>

한편 1980년에 들어와서 국가안보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9) 國防軍史研究所, 『國防政策變遷史』, 1995, 194~195쪽.  
 10)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國防編年史 1971~1975』, 2001, v 쪽.  
 11) 國防軍史研究所, 『建軍 50年史』, 1998, 285 쪽 ; 國防軍史研究所, 『國防政策變遷史』, 1995, 195쪽.  
 12) 企劃計劃豫算制度 : PPBS(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System).  
 13) 合同參謀本部, 『合參史』, 1982, 1390-287 쪽.  
 14) 國防部, 『中期國防基本政策(1978~1982)』, 49-15 쪽.

『국방사』 편찬이 추진되었다. 당시 국방사는 정치·경제 등 사회의 안정유지에 관한 사항, 국가 안보외교에 관한 사항, 국방태세에 관한 사항, 국방관계 주요 사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방분야의 역사서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통령령 제9804호(1980. 3. 8)에 의거 국방부의 소관업무로 공식적인 『국방사』의 편찬이 제도화되었다.<sup>15)</sup>

이러한 국가 차원의 추진 및 지원에 힘입어 국방부의 정책적인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방업무를 종합하는 국방부 자체의 정책 추진내용을 종합하는 역사서 편찬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명칭은 『국방부사』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개념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 및 예하 직할기관의 업무실적을 정리하여 편찬한 부대사 개념의 국방부 역사서였다. 당시의 문건을 보면,<sup>16)</sup> 정책기획관실에서는 3년간을 대상으로 1983년부터 1985년까지의 『국방부사』를 편찬하고, 1986년 이후 매 3년 주기로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방부사』 제1집이 1985년 12월에 발간되었는데, 이는 최초의 『국방부사』가 1954년에 발간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실로 31년만에 국방부사 편찬이 재개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방역사 편찬 기준을 정리해보면 <도표 1>과 같다.<sup>17)</sup>

이렇게 하여 광의의 국방역사를 하나의 구체적인 연구편찬의 영역에서 ‘국방사’와 ‘국방부사’로 구분하여 편찬하는 작업이 실현되어 국방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역사적인 경험의 축적과, 그 경험분석을 통해 얻은 교훈을 미래의 국방정책 추진에 활용하겠다는 군 지도부의 의지를 엿보게 한다.

15) 신영진, 「국방사부 역사 및 업무의 중요성」, 『국방사 편찬세미나』(2000. 12. 21), 25쪽.

16) 「국방부 국내 24100-24 : 국방부사 편찬계획 (1985. 8. 31)」.

17) 혹자는 국방사나 국방부사를 비롯한 국방역사서와 『국방백서』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의 추진방향과 실적 및 전망을 설명하는 일종의 정책보고서이지 그 자체를 역사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물론 『국방백서』 역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국방역사를 정리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백서의 성격 자체가 곧 역사서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표 1> 국방역사의 편찬 기준

구분	수 록 내 용	대상 기간	발간시기	존안절차
국 방 사	국방부, 합참 및 각군에서 수행한 국방정책, 국방조직, 국방제도 및 군비 등의 변천과정을 수록	10년	대상기간 종료 20년후	발간: 대외비 3년후: 평문
국방부사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기관에서 수행한 업무를 기록한 부대사	3년	대상기간 종료 2년내	발간: II급비밀 5년후: III급비밀 10년후: 대외비

### 3. 國防史 編纂의 歷史的 意義

#### (1) 각국의 國防관련 公刊史 編纂

각국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군사사 연구 및 편찬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국방부의 공식 업무를 중심으로 자국의 국방활동 전반에 관한 연구와 편찬 사업은 드문 것으로 보인다. 각국은 각국 나름의 상황에 맞게 군사사 일반을 비롯하여 특수한 부대사 영역에 걸쳐 편찬기관을 통해 일정기간에 관련 공간서적을 간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국방사나 국방부사와 같이 부대사와 이를 발전시킨 종합국방역사서로 편찬함으로써 국방역사를 단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편찬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미국에서는 국방부보다 육군의 군사연구소(Center of Military History)라는 기구가 많이 알려져 있고 조직이나

기구의 편성이 확실하다. 국방부는 육군과 같은 별도의 연구기관은 없고, 국방부와 국방부장관·차관실을 지원하는 정책분석관과 역사관(Policy Analyst and Historian)이 편성되어 있다.<sup>18)</sup>

국방부 역사담당관(Historical Staff)은 4명이며, 이들은 국방부 관리차관 예하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이다. 역사담당관들은 역사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하여 문서 및 자료를 수집하고 편찬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방부내 역사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역사담당관의 업무범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 역사담당관의 업무

- 역사의 기록, 유지를 위하여 문서와 자료를 수집하고 편찬
- 장관실의 최근의 역사자료 작성
- 역사 프로그램에 관하여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국방부내 역사활동의 조정
- 국방정책분석가와 역사가로서 국방부장관과 차관의 정책수행을 조언, 지원, 정보제공

이러한 기능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분류되어 수행되는데 역사연구, 정책 특별과제 연구, 국방부의 역사 활동으로서 효과적인 역사 편찬에 관한 계획 및 정책 개발, 그리고 역사 편찬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 과제로는 베트남 분쟁의 군사·정치적 측면의 다양한 분석을 비롯하여 국방부의 조직과 운영의 변천 분석, 정부문서의 해체에 따른 해당분야의 참여, 미국의 대외관계 자료집을 위한 국방부 관련분야 제공, 국방부행정사(Department of Defense Administrative History) 편찬과 같은 것이 있다. 국방부행정사는 미 국방부의 부대사로서 우리나라의 국방부사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역사편찬의 기초작업으로 특정 주제에 관한

18) 참고자료는 Alfred Goldberg(OSD Historian)가 송부한 자료('92. 3. 26) 참조.

국방부장관과 차관의 공식연설과 같은 문서수집, 요구되는 특별주제에 관한 연표(chronologies) 작성 등은 간과해서는 안될 역사담당관의 임무에 속한다.

주목할 점은 미 국방부내 역사담당관의 임무는 국방부의 최고위 정책결정권자에게 건전하면서도 객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담당관은 국방부장관이나 국방부의 기본적인 임무는 물론 대통령, 의회, 다른 정부부처, 공공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필요한 역사적인 배경 지식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최고위 정책 결정권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지적 수준의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데, 요구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하여 미국사나 관련 분야의 학위 소지자로서 가급적이면 박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내에 있는 역사실은 5명의 역사전문가(GM-15 정, GM-14 부, 그리고 3명의 GS-13 역사전문가)와 1명의 편집자(GS-11)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체계는 역사실(History Office)과 합참의장으로 연계되어 있다.<sup>19)</sup> 합참의 역사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합참사(合參史) 편찬을 비롯하여 합참의 역사자료 정리·발간, 합참내의 각 부서에 역사자료의 제공, 그리고 부여된 특정역사 연구 및 보고 등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국방정책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인 국방부나 합참의 역사 기구가 담당하고 있는 활동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미 육군의 군사연구소는 100여 명의 인원으로 군사사 연구편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해 한·미간에 공동으로 실시한 노근리사건 조사 역시 미 육군의 군사연구소가 크게 기여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바다.

미 육군의 군사연구소는 1950년 육군성 특별참모부인 역사처가 군사감실

19) 이하 Poole Walters(Historical Office의 부실장)이 송부한 자료('92. 3. 31) 참조.

(Office Chief of Military History)로 개편되면서 출범하게 되었다. 특별 참모부는 1973년 야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때 군사감실을 군사연구소로 개칭하였다.<sup>20)</sup> 이 연구소의 편성은 장교 12명, 사병 5명, 민간인 99명, 기술직 4명, 기타 2명 총 122명이며, 소장은 군사감(Chief of Military History)이고 그와 동격으로 있는 사관장 또는 석좌사관 (Chief Historian)이 있다. 군사감은 육군의 역사 프로그램 운영, 육군성 장관 및 참모총장에게 모든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조언을 한다. 석좌사관은 역사와 문서보존에 관해 소장에게 조언하며, 육군성내 모든 역사 및 문서보존부서를 지도 감독한다.

군사연구소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조사와 분석, 정확한 역사정보 제공, 역사 기록, 역사적인 전망 제공, 지휘관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득된 교훈(lessons learned)”을 제공하는 데 있다. 군사연구소의 임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1)</sup>

#### △ 군사연구소의 임무

- 기본임무로 조사와 분석을 위한 역사자료 제공 및 교훈 제시
- 지시 및 특별 과제를 포함한 지휘관의 역사 프로그램 수립
  - 육군의 모든 인쇄물에 있어 역사성을 띤 원고의 감수
  - 지휘관의 연보(Annual History) 작성
  - 지휘관의 역사적인 관심사에 응답

이러한 국방부나 합참, 그리고 육군 예하에 있는 역사기관 외에 미국에는 육군대학의 군사연구소(Military History Institute)도 주목할 만한 역사연구기관으로 공간사의 연구편찬과 관련이 있으나, 대체로 군사분야의 “비공식 자료” 수장과 개인의 작품이나 수집품의 기증을 받는 정부기관의 수

20) 金鍾求, 「美·日의 主要 軍史研究所 紹介」, 『軍史』25, 1992, 225쪽.

21) AR 870-5('99. 1. 29)/Internet CMH Homepage 참조.

집창구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sup>22)</sup> 육군대학 총장이 연구소장을 겸하고 있으며, 사서, 사가, 기록보존인, 박물관 관리, 행정 등 33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방위청의 직할기관인 방위연구소(防衛研究所)가 방위청사와 자위대사를 편찬하는 기관인데, 그들은 ‘국방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sup>23)</sup> 일본에서 국방사라는 용어는 전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서 제국주의의 팽창과 더불어 주로 관찬사의 입장에서 사용되었다. 여러 용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메이지(明治)시대 사이토(佐藤鐵太郎)는 ‘국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의 제국주의사관을 전개하였다. 그는 『제국국방사론(帝國國防史論)』이라든지 『제국국방사론초(帝國國防史論抄)』와 같은 저술에서 국방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정을 서술하였다.<sup>24)</sup> 이토오(伊藤正徳)는 1941년에 『국방사(國防史)』를 마쓰바라(松原晃)는 1942년에 『일본국방사상사(日本國防思想史)』를 저술하여 ‘국방사상’ 혹은 ‘국방사’라는 일본 나름의 군사사 관점을 계승하였다.<sup>25)</sup> 현재 일본에서 편찬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방·군사관련 공간사는 방위청 및 각 자위대별로 1년 단위의 부대사를 들 수 있겠다. 방위청사는 방위청 역사실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7명으로 편성된 전문요원이 부대사만 전담한다.<sup>26)</sup>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해당하는 국방서로서는 『방위백서』가 발간되어 매년 발표된다.

22) 金鍾求, 「美·日의 主要 軍史研究所 紹介」, 229~231쪽.

23) 「주일무(첩) 00-0211 : 국방역사발간」(2000. 4. 4) ; 「隊史等について」(일본대사관 제공자료, 2000. 9. 27).

24) 佐藤鐵太郎, 『帝國國防史論』上·下, 東京, 原書房 1900 ; 『帝國國防史論抄』, 東京印刷株式會社, 1902.

25) 伊藤正徳, 『國防史』, 東京, 東京經濟新報社 1941 ; 松原晃, 『日本國防思想史』, 東京, 天理時報社, 1942.

26) 「주일무(첩) 00-0211 : 국방역사발간」(2000. 4. 4).

그밖에 각 자위대별로 작성되고 있는 공간사는 비교적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육상·해상·항공자위대 및 직할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방·군사관련 공간사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27)</sup>

△ 일본 자위대 및 직할연구기관의 편찬 현황

- 육상자위대
  - 육막총무과(陸幕總務課) 문서반에서 부대 창설이래 매년 육상막료의 연간 업적에 관한 내용을 요약 기재하는 방식으로 「육상자위대사」를 편찬
  - 이외에 육상방면대사(陸上方面隊史), 육상단사(陸上團史), 육상연대사(陸上聯隊史), 직할부대사(直轄部隊史) 등을 편찬
- 해상자위대
  - 해상자위대는 海幕歴史保存事業局 편찬실에서 「해상자위대사」를 편찬
  - 25년을 주기로 편찬하는데, 현재는 25년사에 이어 50년사를 편찬 중
- 항공자위대
  - 항공자위대는 空幕總務課의 주관하에 「항공자위대사」를 부대 창설 이래 매년 편찬
- 직할 기관
  - 방위연구소는 년사편찬위원회 사무국(年史編纂委員會事務局)에서 30~40년 주기로 편찬
  - 방위대학교는 년사편찬사무국(年史編纂事務局)에서 10, 20, 50년 주기로 편찬, 현재는 50년사를 편찬 중
  - 방위의과대학교는 년사편찬사무국에서 10년사, 20년사를 편찬
  - 기술연구본부는 년사편찬사무국에서 10년사, 25년사를 편찬

일본의 군사사 연구기관인 방위연구소는 일본 자위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국내·외 정세를 종합 분석하는 제1연구부와 제2연구부 외에 전사부(戰史部)를 설치하여 자위대의 교육 및 연구에 활용하

27) 「隊史等について」(일본대사관 제공자료, 2000. 9. 27).

면서 대외적인 전사의 조사 연구, 전사의 편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구의 정원은 121명으로 현역과 군사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sup>28)</sup>

중국의 군사 및 국방의 역사에 관한 연구 편찬은 군이나 국방부 차원을 넘어서 당과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적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념과 문서' 통제의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그만큼 국방·군사의 편찬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원칙적으로는 당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예하에 있는 인민해방군총부(人民解放軍總部), 국방대학(國防大學), 군사과학원(軍事科學院)에서 주로 군사사 관계의 서적을 편찬하고 있으나, 그 예하에 있는 각군사령부(各軍司令部) 또한 필요한 군사사의 편찬, 발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국에서 편찬된 그간의 군사사 편찬물을 보면, 『당대중국(當代中國)』 편찬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인민해방군사(人民解放軍史)'의 편찬이 대표적이다.<sup>29)</sup> 국가차원의 『당대중국』은 1949년 혁명이후의 중국에 관한 종합적인 역사, 즉 중국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의 총서인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에서는 공간사로서 국방군사편을 편찬하고자 편집위원회(于永波 主編 외 17명 위원)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국방군사편을 편찬하기 위해 7명의 위원이 재직하는 편집위원회 관공실을 두었다. 그런가 하면 인민해방군사 역시 공간사로 발간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아이핑(張愛萍) 주편(主編) 외 19명이 편찬위원을 그 예하에 14명의 편집부를 두어 1949~1988년까지의 역사를 다룬 종합적인 편람사를 발간한 바 있다.

그 밖에 당과 국가 차원의 편찬사업을 지원하는 중공중앙당사연구실(中共中央黨史研究室)이나 중공중앙문헌연구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전군당사

28) 金鍾求, 『美·日의 主要 軍史研究所 紹介』, 238~243쪽.

29) 當代中國出版社, 『當代中國』, 北京, 1994.

자료정집관공실(全軍黨史資料征集辦公室), 그리고 각 원수전기(元帥傳記) 편사조(編寫組)와 같은 편사조의 운영을 통해 필요한 국방·군사 서적의 출판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당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국방군사에 관련된 공간사의 편찬 중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구는 군사과학원(軍事科學院)과 국방대학원(國防大學院)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30)</sup> 군사과학원은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속 기구로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이론에 관한 최고의 연구기관이자 전문 군사 학술연구의 센터로 계획, 협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사과학원의 기구로서 역사연구부(歷史研究部)는 군사사에 관한 많은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중국군사통사(中國軍事通史)』(1985)를 비롯하여 국가교위(國家教委)가 군사과학원에 지시하여 발간한 『중국군사사략(中國軍事史略)』(1988) 등이 그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사(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 역시 매 한가지다. 그러한 성과를 집성한 각종 국방군사 관련 사전류도 발간되고 있는데, 군사과학원에 편성된 중국대백과전서 군사편집실(軍事編輯審室)에서는 『中國人民解放軍軍史分冊』을 편찬했던 것이다.

한편 각군 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사 편찬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군종·병종별로 역사총서 편찬위원회가 편성되어 필요한 해방군의 역사관련서를 편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해군 사령부(海軍司令部)에서 발간한 『근대중국해군』과 『해군사』(1989)가 공식 해군 역사서로 발간되었다. 그런가 하면 중국군사사 편사조(編寫組)의 『중국군사사(中國軍事史)』 역시 계속 편찬되고 있다. 이러한 각 기관의 연구·편찬 활동은 기본적으로 中央檔案館, 解放軍檔案館, 解放軍 編寫組가 있어 기본자료의 수집 및 지원을 받고 있다. 편찬된 檔案은 발간된 날로부터 30년 이후 사회에 개방되나 국방·외교·공안·국가안전 등 국가의 중대이익과 관련되는 檔案은 개방시기를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30) 白奇寅, 『中國軍事政策, 1949~1990』, 國防軍史研究所 1999, 98~99 쪽

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1)</sup>

프랑스에서는 국방부 직할기구인 군사연구소가 매 3~4년을 주기로 「국방과 군」을 발간한다. 이는 국방제도, 국방조직, 국방전략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국의 국방역사를 정리하는 공간사적인 의미에서 역사서라고 평가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국방에 관련된 모든 국방예산 및 인원 등을 통계화 한 「국방관련통계」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가 하면, 특별한 계기 발생시 또는 필요에 의해 연감, 통계, 각종 홍보물(예 : 코소보 작전의 교훈) 등을 수시로 발간하고 있다.<sup>32)</sup>

프랑스의 국방관련 공간사의 편찬은 대체로 짧은 주기로 국방활동의 정보를 수록한 서적을 중심으로 편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성격상 역사 서적의 의미를 가진다기 보다 국방과 국가안보상의 필요에 의한 현행 자료의 정리 모음이라는 측면이 강한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으로 문건의 비밀을 보장하는 기간은 30년으로 정하나 내용에 따라서는 작성된 날로부터 60년 이후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어 차이가 있다.<sup>33)</sup>

또한 국방부 군사연구소에서는 군사 및 군사사에 관한 연구와 편찬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의 보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예하에 육군, 해군, 공군 군사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sup>34)</sup> 프랑스에서는 각 군의 관련문서 일체를 일단 생산부서(부대)가 보존 기간이 경과하면 군사연구소로 이관시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 군의 군사연구소장은 현역 장군이 재임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육군 100명, 해군 50명, 공군 40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31) 이승휘, 「중국당안제도와 당안관의 역사와 현황」, 『세계 각국의 역사기록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1996년도 하반기 학술 심포지움 : 이하생략), 한국역사연구회, 1996, 94쪽.

32) 「주불무(첩) 00-105 : 국방역사 발간 간행물 관련 보고」(2000. 3. 31)

33) 주경철, 「프랑스의 고문서 보관소제도」, 『세계 각국의 역사기록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1996년도 하반기 학술 심포지움), 한국역사연구회, 1996, 14 쪽.

34) 「'96 공무출장 귀국보고」(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문건).

끝으로 러시아의 국방 및 군사 연구편찬의 현황을 알아보도록 한다. 러시아는 군사학의 오랜 전통을 지닌 나라이다.<sup>35)</sup> 러시아에서는 총참모부가 각 부서의 요구를 종합하여 작성한 「장기 학술연구계획서」나 「연례 학술연구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여 국방관련 역사서를 발간하고 있다.<sup>36)</sup>

러시아군의 역사관련 발간자료는 크게 군사력 건설에 관련된 편찬물과 건설된 군사력의 유지에 관한 편찬물로 대별된다. 지금까지 1941 년에서 1960년까지 전시와 전후 군사력 건설 경험을 다룬 「소련 국방부 명령을 통해 본 군사력 건설 역사」를 비롯하여 러시아군 건설에 있어 군개혁의 역사적 경험을 다룬 「러시아의 군개혁」, 1864년에서 1917년까지 러시아군의 편성, 구조, 장비 등을 다룬 「러시아의 군관구 설치 역사」, 1802년에서 2002년까지 러시아, 소련, 러시아연방의 국방부 구조 및 기능을 분석한 「국방부 역사 개요」, 그리고 1918년에서 1945년까지 소련해군 발전과정에서의 전투 편성 및 편제 변화를 종합 분석한 「소련해군 전투편성 및 편제」, 정규군 창설 및 발전을 다룬 「러시아 정규군 창설 및 정착」, 러시아군 건설시의 주요 자료를 정리한 「자료로 본 러시아군 창설 및 건설 역사」 등이 발간되었다.

군사력 운영과 관련된 편찬물로는 러시아군 지도자들의 인생과 러시아군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룬 「인물 및 그들의 일생으로 본 군 역사」, 러시아군 장병 교육 및 훈련의 역사적 경험을 발굴해 낸 「러시아 군사교육 및 훈련」, 간단한 주석을 달아 러시아 군사사건의 연보를 기술한 「러시아군 역사 자료 및 사건 일기」, 모든 전쟁에서의 러시아 군사전략 경험을 축적한 「19~20세기 전쟁에서의 연합전략 : 러시아의 연합작전 경험」,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발간한 「1945~1995년 러시아연방 전사자 및 민간 희생자 추모서」, 사병 및 하사관 교육용 교재로 발간된 「국가수호 근무중예」, 장교와

35) 육사화랑대 연구소, 「러시아의 군사학」, 『군사학 학문체계와 교육체계연구』, 2001, 55~88쪽.

36) 이하 「주러무(첩) 0-0354 : 러 국방역사 간행물 관련 첩보」(2000. 4. 7).

군사관 교육용 교재로 발간된 「러시아 국가와 군과 군사교육」, 군사이론, 군사력 건설, 전술, 무기 및 장비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군사 백과사전」, 군 역사 연구실적이 축적된 「간단한 주석을 단 발간서적 목록」 등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역사서 발간을 위한 준비 및 발간절차의 추진은 역사서 발간계획이 총참모부가 작성하는 「학술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 인가를 받음으로써 시작된다. 계획서에는 학술연구기관 및 정부와 군의 각 부처에서 요구한 연구주제가 포함되며, 요구 부처는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로 인해 획득될 기대효과, 그 결과의 실현방안, 연구업무의 분량 및 소요예산, 연구기간, 연구의 주 담당자와 보조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편찬과 관련하여 국방부 예하에 있는 군사연구소는 평소 역사 연구 및 역사관련 사항을 총참모부에 조언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간사적인 의미로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사연구 편찬의 현황을 정리해보면 <도표 2>와 같다.

<도표 2> 각국의 군사연구 편찬현황

구 분	공간사 편찬	담 당 기 관	
		기 관 명	기 능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행정사</li> <li>합참사</li> <li>각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역사담당관)</li> <li>육군성 군사연구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적인 자료 및 전사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편찬</li> <li>국방정책에 대한 조언, 지원, 정보 제공</li> </ul>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위청사</li> <li>자위대사(부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위청(역사실)</li> <li>방위연구소(전사부)</li> </ul>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민해방군사</li> <li>기타 전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방군 편사조</li> <li>군사과학원(역사연구부)</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과 군’</li> <li>각종 국방통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연구소</li> </ul>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술연구계획서’에 의한 편찬</li> <li>국방부 역사개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연구소</li> </ul>	

## (2) 國防史 編纂의 成果

1980년 3월 8일 대통령령 제9804호에 의거 국방부의 공식 업무가 된 『국방사』의 편찬은 1984년 『국방사』(제1집)의 발간으로 결실을 맺었다. 『국방사』(제1집)은 1945년 광복으로부터 1950년 6·25전쟁 직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창군과정(創軍過程)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현대 한국국방사를 종합하는 시발점이 되었다.<sup>37)</sup> 이후 『국방사』의 연이은 편찬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부사』가 편찬 발간되었던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국방역사의 현황은 <도표 3>과 같다.

최근에 들어와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국방사』 제4집을 발간했는데, 주목할 점은 이에 앞서 『국방편년사(1971~1975)』를 발간했다는 사실이다. 편년사란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된 역사 기록이다. 이는 기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본말을 정리한 역사 기록인 소위 기사본말체(記事本末體)나

&lt;도표 3&gt; 국방역사 발간현황

구 분	대상 기간	발간 일자
국 방 사	제1집 : 1945. 8 ~ 1950. 6	1984. 11
	제2집 : 1950. 6 ~ 1961. 5	1987. 12
	제3집 : 1961. 5 ~ 1971. 12	1990. 10
	제4집 : 1972. 1 ~ 1981. 12	2002. 4
국 방 부 사	제1집 : 1983 ~ 1985	1985. 12
	제2집 : 1986 ~ 1988	1991. 12
	제3집 : 1989 ~ 1991	1994. 12
	제4집 : 1992 ~ 1994	1997. 12
국방편년사	1971 ~ 1975	2001. 12

37) 國防部, 『國防史』 第1輯, 1984, 「尹誠敏 國防部長官의 序文」.

본기(本紀)·지(志)·열전(列傳)의 형식으로 기술하는 기전체(紀傳體)의 역사 정리법과 함께 행해졌던 오랜 역사기록 방법의 하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편년사는 종합적으로 역사를 편찬하기 위한 전 단계로 역사의 전개순에 의한 연대기(chronology)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주제별 역사적 과정을 충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선행작업이라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국방부가 최근에 발간한 『국방사(國防史)』 제4집(1972~1981)에 앞서 『국방편년사』가 발간된 것은 그러한 까닭이다. 편년사는 최근 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된 상황에서<sup>38)</sup> 그 역사학적인 접근방식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자료 대한민국사』 역시 편년체의 역사편찬 방식을 취하고 있는 편년사로서 한국현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음에서도 잘 알 수 있다.<sup>39)</sup> 군사편찬의 분야에서 국방 및 군사관련의 기초문건에 토대를 두고 편년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인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방·군사 분야의 공간사 편찬이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록물관리'에 대한 실천적인 참여의 결과이며, 6·25전쟁 이후 역사가 주는 교훈을 남기기 위한 전사(戰史)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그 영역을 점차 확대시켰던 군사사 연구 편찬의 역사적 성과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투명한 국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기록유산을 물려주어 기

38) 1990년 후반기에 기록문화와 기록관리체제에 관한 정부 및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7년 학계를 중심으로 관련기관의 설립이 추진되어 1998년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창립되었다. 그 후 1999년 1월 29일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法律」(法律 第570號)을 제정한 뒤,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6,609호)으로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후 국가(공공) 기록물에 관한 관심이 활발하게 제기되어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기관에서 추진 중에 있다.

39) 『資料 大韓民國史』, 探究堂, 1970년 제1권(1945년 8월~1946년 1월)이 출판된 후, 2000년 12월 현재 제14권(1949년 9~10월)이 발간되었다.

록물의 정보자원화를 실현한다는 데 있다면 국방부에서 편찬한 국방사도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러한 목적에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일련의 국방사 편찬물들은 우선적으로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을 알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추진한 제반 정책적인 업무수행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후대에 전해주는 기록 매체가 된다. 게다가 국방사의 편찬은 결국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전후방에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군인의 삶'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국방부의 정책 브레인에서부터 전후방 각지에서 수행하는 군인들의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가기록물 관리의 일환으로 편찬된 국방사 관련 편찬물들은 일반 역사학계의 보편사로서의 현대사 기술에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한국현대사의 국방·군사 영역에 대한 연구의 장(field)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군사사 영역은 일반 역사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한 분야로 발전되고 있는 만큼 정치·외교사의 한 부분이나 사회경제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과 국방부에서 공신력있는 국방사를 집필하여 발간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만하다.

또한 국방사의 편찬은 한편으로 기록의 유지 혹은, 자료의 수집관리 차원에서 국방정책의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정보활용은 그 자체가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의 파악 및 전수에 필요한 시간을 그만큼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추후에 필요한 업무소요나 개발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역대 『국방사』의 발간 취지에서 '국방정책의 수립, 군사전략의 입안, 국방조직 및 제도의 운용·발전'을 위한 토대로 활용되리라는 기대로 거듭 강조되었다.<sup>40)</sup>

40) 國防部, 『發刊辭』, 『國防史』第 輯, 1990; 國防部, 『國防史』第 輯, 1987.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국방사의 편찬은 군사전문가 집단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일정한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곧 국방 활동을 얼마나 정책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접근했는가를 엿보게 하는 지표가 되기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하여 우리의 안보를 보다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국방력을 건설하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하여 미래에 국방정책을 개발하는 정보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다.<sup>41)</sup> 이를 위해 국방사를 편찬하고 집필함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료생산 및 보존의 단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론상 자료수집은 1차자료의 수집단계와 집필시기에 이루어지는 자료수집의 보강단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집필시기의 자료수집은 1차자료의 수집 결과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추진 당시의 관련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체험을 경청하고 기록하여 자료로 삼는 이른바 구술사(口述史, oral history)도 포함될 것이다.<sup>42)</sup>

집필시 자료수집의 문제는 제외하고 1차자료의 수집에 관한 문제만을 보면, 국방사 편찬은 앞서 언급했듯이 1980년 3월 8일 설치 규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전사편찬위원회에 국방사부가 설치되어 『국방사』를 편찬함으로써 자료수집의 업무가 중시되었다. 이에 따라 자료수집 차원에서 『국방부사』를 편찬하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sup>43)</sup>

41) 그러나 Brian Bond가 지적한 다음의 점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1945년 국방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많은 저서들이 완벽한 문헌조사 및 충분한 검토라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역사적 접근방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관계 또는 정치학을 보완하는 역사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임지현 외 역, 『What is History Today(오늘의 역사학 - 쟁점과 전망)』, 역사비평사, 1993, 48~49쪽).

42) 구술사에 대해서는 Stephan E. Everett, *Oral History Technics & Procedures*,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15~58쪽을 참조. 한국의 군사사 분야에서도 최근 노근리사건 조사에서 구술사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로 채택되어 활용되었다(노근리조사반, 『노근리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01. 1).

43) 이병태, 「국방사 편찬연구에 관한 제언」, 『국방사 편찬세미나』(2000. 12. 21), 21쪽.

이러한 자료수집의 문제는 군사 및 국방관련 자료의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로 여겨진다. 현행 정부의 기록물관리 법령이 200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지만 아직은 전산시스템 S/W개발 및 기록물관리법령에 대한 교육 등의 준비과정에 있는 실정이고,<sup>44)</sup> 통일·외교·안보·군사분야는 특수자료화하여 별도의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다.<sup>45)</sup> 군사 및 국방자료의 경우도 특수자료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때 특수자료관의 운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

군사 및 국방자료의 관리는 일반 공문서와는 달리 군사보안규정에 따라 군사보안을 고려한 자료의 비밀등급과 그 등급의 저하절차가 요구되어 왔다.<sup>46)</sup> 이런 점에서 자료의 역사자료화에 있어 절차상 세심하고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집필시기 자료수집에 앞서 선행작업으로 자료축적 및 정리의 의미를 지닌 편찬을 행해왔거나<sup>47)</sup> 또는, 별도의 자료 수집·관리·존안 제도의 발전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국방사』 제1집 편찬 이후 논의된 자료수집의 절차에 대하여 거듭된 일련의 검토과정이 이를 잘 말해준다.<sup>48)</sup>

44) 金才淳, 「기록물관리법 제정·시행현황과 전망」, 『군사편찬연구 세미나』(2000. 12. 8), 9쪽.

45)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法律 第5709號, 1999. 1. 29)」의 제10조.

46) 군사보안규정은 국방부 훈령으로 발령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국방부 훈령 제633호)에 의해 세부적인 실무에 적용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법률 제4616호)과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11호),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6609호)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에 대한 군사보안업무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기록물보존관리지침인 비밀기록물원보의 보존관리지침(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 수집 12310-2000. 5) 등이 모두 국방역사를 편찬하기 위해 관련된 군사·국방관련 자료 수집 및 존안절차에 관한 관련법규라고 할 수 있다.

47) 기존의 군사와 관련된 공간 간행물이 모두 이러한 과정 및 절차에 따라 발간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48) 신영진, 「국방사부 역사 및 업무의 중요성」, 『국방사 편찬세미나』(2000. 12. 21), 26쪽 ; 「업무보고 : 국방부사 편찬체계 개선(1992. 2. 26)」 ; 「정기 33130-64 : 국방부사/국방사 발간규정 및 발간주기 검토지시(2000. 2. 22)」 ; 「국군연 제 148호 : 국방역사 업무규정

현재 정책성 문건을 포함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재를 득한 업무추진 계획과 결과보고 등은 역사자료화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아 미래에 국방정책 개발에 활용토록 하는 일련의 '자료수집과 연구분석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sup>49)</sup> 이는 국방정책을 수행하는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고 나아가 이를 다시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이른바 '정보뱅크화'에 대한 지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 4. 맺 음 말

지금까지 국방사 편찬과 관련하여 각국의 국방관련 공간사 편찬의 실태와 비교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일반 역사의 연구는 말할 것 없겠지만, 공간사 편찬의 중요성은 여기서 새삼스럽게 역설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는 이미 국가적으로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공공기관의 공문서 (역사)자료화를 통해 공공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운영의 엄청난 지적 경험과 그 결실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화한 상태이다.<sup>50)</sup>

실제로 우리는 국방업무의 차원에서 최근 들어 자주국방의 실현이 단지 군사과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개발이 단지 이론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교훈에서 비롯된 개발이어야 한다는 점도

(안)작성 보고 (2000. 3. 13) ; 「국방역사발전체계정립」(2000. 10) ; 「국방역사업무규정」(2000. 10) .

49) 육군에서는 역사자료의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미 '부대사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절차를 육군규정에 명시하여 실행하고 있다.

50) 「법률 제5709호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999. 1. 29).

인식하게 되었다. 경원선 복원, 노근리사건 조사, 그리고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등 최근에 제기되었던 여러 현안들이 그러한 예다.<sup>51)</sup>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국은 각기 나름대로 국방·군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방부를 비롯한 각군 예하에 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추세에 부응하고 있음은 예외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나라의 국방관련 공간사의 편찬이 문제의식이나 구체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앞선 점도 있다. 무엇보다 국방·군사 분야의 공간사 편찬은 국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록물관리'에 대한 실천적인 참여의 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6·25 전쟁 이후 역사가 주는 교훈을 남기기 위한 전사(戰史) 연구 편찬을 비롯하여 그 영역을 점차 확대시켰던 군사사 연구 편찬의 역사적 성과이기도 하다. 국방사 관련 편찬물들은 한편으로 일반 역사학계의 보편사로서의 현대사 기술에 일정한 기여를 하면서 한국현대사의 국방·군사 영역에 대한 연구의 장(field)을 설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기록의 유지 혹은 자료의 수집관리 차원에서 국방정책의 업무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편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편찬의 공신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자료의 생산·관리·존안과정에 더욱 정밀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간사 편찬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의 일환인 국방역사 편찬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료수집체계와 편찬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이 요망된다. 요컨대 자료의 효과적인 수집이 곧 내실있는 국방사 편찬의 관건이 되는 셈이다.

51) 백기인, 「군사연구와 국방정책」(『국방일보』, 2001. 2. 22).